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8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16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이상식 · 김태년
김원이 · 이수진 · 이기현
소병훈 · 박용갑 · 김현정
윤준병 · 정준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
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.

이때 여신금융기관, 신용정보회사,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.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.

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.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8조의2).

법률 제 호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”을 “채권추심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u>3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</u> <u>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</u>	<u><삭 제></u>
<u>4.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</u> <u>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</u> <u>권자</u>	<u><삭 제></u>
<u>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</u> <u>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</u> <u>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</u> <u>권추심을 하는 자(다만, 채권</u> <u>추심을 하는 자가 「대부업</u> <u>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</u> <u>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</u> <u>부업자, 대부중개업자, 대부업</u> <u>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</u> <u>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</u> <u>경우는 제외한다)</u>	<u><삭 제></u>